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66 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0.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0. 3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 제출일자: 2019. 10. 18.
- 회부일자: 2019. 10. 18.
- 검토기간: 2019. 10. 21. ~ 2019. 10. 25.

2. 개정이유

은행권의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 사회적인 정책 방향에 맞춰 연대보증인 조건을 폐지 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대보증인 조건에 관한 조문 변경(안 제6조의 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전반)

4. 검토의견

○ 동 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경우, 은행권의 연대보증 대출 제한으로 인해 융자 실적이 저조(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신규 융자 실적 전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에서 ‘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 요구 조항(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

○ 지금까지 정부는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추진¹⁾하고 있는 점과 다양한 중앙정부 대출제도 시행²⁾으로 동 기금을 통한 융자실적이 저조한 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에 대한 권고 의견

- 현재 상기와 같이 중앙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출제도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동 기금의 활용이 저조한 점은 전국적인 상황.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동 기금 운영과 관련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달서구에서도 동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조례 폐지 사례: 대구시 서구 (2019. 5.), 남구(2018. 12.) 동구(2018. 10.)
서울시 용산구(2018. 11.), 부산시 서구(2019. 8.) 등

1) ①은행 :('08.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12.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②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 ('13.7월) 연대보증 폐지 도입 등

2) 2009년 이후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중임.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